

완전한 환경정화·피해배상 절실

- 경제적 가치산정, 가해자 명확한 책임구분 필요
- 전문 방제팀에 의한 체계적 생태복원 이뤄져야



12월 24일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과 희망계삭소가 공동 주관한 '태안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피해대책 및 지역 미래발전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피해 보상 및 생태·환경 조사, 방제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책, 향후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성수 변호사-씨프린스호 사건 당시 국제기금(IOPC Fund)에서는 어업피해보상에 있어 피해어업인 측에 대해선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선임한 시베이어의 의견(보고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상이 농후했다.

또 국제기금은 씨프린스호 사고 배상 당시 국제기금이 과학적 증거를 내세워 어민들의 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선례를 고려해 이런 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과학적 증거 수집을 도와줘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는데 관련 자료는 영문 자료 외에 별로 없고, 적용 법규 역시 국내법과 국제법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절실하다.

맨손어업 종사자 등과 같이 소득 증빙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어로소득 통계자료 등이 지원돼야 한다. 또 국내 관련 판례는 물론, 국제기금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청구를 해야 한다.

▲전승수 교수=초기방제 작업에 있어 물에 기름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타르소각까지 생각해



야 한다. 연안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으니 초기방재의 정의 뿐만 아니라 평가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뒤 논의해야 한다.

초기방재의 문제점과 교훈을 생각해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안선에 기름 찌꺼기가 몰려있는 게 문제인데 자원봉사 활용시 메뉴얼에 따라 연안 특성에 맞춰 제거작업이 수행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피해 범위 확산은 물론, 장기적인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초기방재시에 해안 암석 등에 고압수를 쓰는데 암석제거 때 온수의 온도에 따라 피해가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하며, 갯벌에 대한 폭넓은 규정 및 우리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전체 해안선에 대한 조사에서 세척 구간, 생물의 서식지 파괴 및 복원 범위 등 해안선 특성에 맞게 방재방법, 자원봉사 투입 등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주민과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한 신탁협의회를 구성하고, 유류오염, 생태, 문화복원 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장기적 손실과약 및 지역개발 계획, 지역공동체 복원체제, 생태계 복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유류오염 방재 메뉴얼 작성, 대형유회수선 확보 및 유조선 호송선 제도 시행, 유출사고 대응 장비 개발 및 보유, 이중선체 유조선 의무화, 방재담당자 교육 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체계 구축 및 행동메뉴얼 마련 등 유류오염 방지 및 방재 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유류오염 벌금 및 피해보상 법적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강홍순 처장=유조선의 이중선체 의무화 등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며, 해상교통관리시스템(제도, 장비, 운영인력),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감시시스템 구축, 안전한 피항지 확보, 재난시 대응 계획 및 훈련이 필요하다.

주요 해역별 오염 확산을 정확히 예측하고, 해양환경조사(생태, 지형 등) 및 민감지역을 선정

해 우선 방재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방재활동과 관련해 방재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고, 해양오염사고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유처리제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전문가 자문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상과 관련해선 신속한 피해조사와 객관성 확보, 어업소득자료의 객관성 확보, 정부에 의한 수산자원 및 환경현황조사,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와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하며, 환경영향조사 및 복원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조사 및 자연친화적 복원 방법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방재계획 및 지역방재 실행계획을 재평가하고 이를 재수립해야 하며, 방재능력을 권역 별로 2만~3만톤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정종관 팀장=유처리제의 사용은 정책 의사결정 문제로 현장 방재책임자는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사용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기름오염도가 심한 지역은 굴삭기로, 덜한 지역은 선별기로 기계적인 토양정착법을 활용해 제거할 수 있다. 염도가 높아 방재작업 과정에서 무스 형태로 가라앉은 것은 해저관찰 및 기름 상태를 평가해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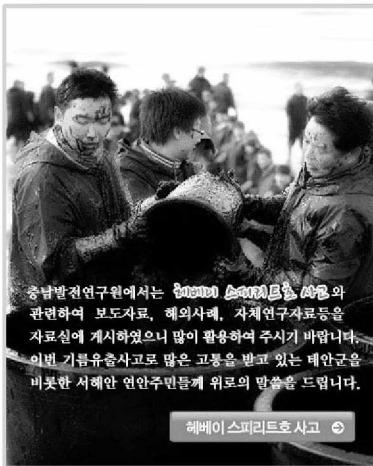
복지부의 역학조사결과 구토 증세 등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독성에서 비롯됐다는 잠정결론이 나온 만큼 방재작업이 장기화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필수다.

장기계획으로 환경생태 모니터링시 2008년부터 10년 간 사고 지역 주변 생태계의 변화, 토양 중 유류의 잔류 실태 등의 환경영향조사와 함께 훼손된 해안사구의 복구, 잔류 유류 제거 등 생태계 복원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하며, 기름유출로 해저퇴적 기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해저수생태계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요구된다.

환경자원 가치와 장기적 생태복원에 소요되는 자원의 손실가치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산정이 중요하다. 특히 생태복원의 기준 시점, 복원 정도를 고려한 엄중하고도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 글은 중도일보(2007년 12월 25일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충발연, 헤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 사고 관련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Hebei Spirit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해외사례, 자체연구자료 등을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태안군을 비롯한 서해안 연안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헤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지난 12월 7일 발생한 헤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충발연 홈페이지에 자료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료실은 방재관련, 환경영향관련, 배상관련, 해외사례, 관련법률, 언론보도자료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고 관련 전문가, 연구자,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충발연 관계자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사고 관련 자료의 공유로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충발연에서도 이와 관련한 환경, 관광,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서해안을 살리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 www.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2007년 제2차 정기 이사회 개최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연구원 세미나 가져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12월 6일 오후 3시 대천 FUN BEACH호텔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충발연 이사장)를 비롯한 이사진과 충발연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갖고,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이사회에 앞서 '시도연구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주현 원장의 주제발표, 참석한 이사진과 연구원간의 토론 등 충발연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충남발전연구원이 타 시도연구원과 비교해도 정책연구능력과 연구 성과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년 초 광주 신청사 이전으로 연구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 믿고,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앞으로 충남의 정책연구는 공무원, 관계기관과의 공동연구, 코칭과 매니징 역할 등 이론과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 연구에 초점을 맞춰 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하반기 공개경쟁 신규연구원 임용 및 임명장 수여

충남발전연구원은 2007년 하반기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4명의 신규연구원을 임용하고 12월 3일 위명장을 수여했다.

부서별 신규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성 명 | 임재영 | 윤정미 | 이관률 | 이인희 |
| 직 급 | 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
| 부 서 | 산업경제연구팀 | 지역정책연구팀 | 지역정책연구팀 | 문화관광연구팀 |
| 연구분야 | 지역경제, 기술경제 | CIS, 도시계획 | 지역개발, 지역경제 | 지리학 |

충발연, 대발연과 함께 추계 단합대회 개최

- 예산 덕숭산 등반대회 등 화합과 단결의 시간 가져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1월 9일 예산 덕숭산 등반대회 등 추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번 단합대회에는 연구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덕사 내의 문화재를 살펴보고 덕숭산 정상까지 등산하며, 양 연구원의

우의와 단결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충발연과 대발연은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 연구과제 수행을 계획하고,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며 올해처럼 연구원 단합대회도 매년 함께 치를 예정이다.

연말까지 충남 4개 권역별 '갈등관리 정책포럼' 줄이어

- 충청연 주관 공동 워크숍 개최 등 갈등 예방과 해결에 힘 모아 -



충청남도가 상생과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권역별 포럼을 창립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하 ‘포럼’)의 협력과 지원으로 이뤄지는 충남의 권역별 갈등관리 정책포럼은 11월 2일 보령시 한화리조트에서 창립

총회를 가진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총 4개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정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 갈등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권역별 포럼 현황을 살펴보면 ▲북부권역(천안, 아산, 연기, 예산) ▲서남부권역(공주, 논산, 계룡, 금산) ▲중부권역(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해안권역(서산, 태안, 당진, 홍성)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권역별 포럼을 총괄하는 중심도시를 시·군 하나씩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 창립총회에서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된 조성국 청양 이장협의회

장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서로의 입장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우리 지역의 갈등사안들을 논의하고 보다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천적 포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상임공동대표 권경득)과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의 공동주최 및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주관으로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의 창립총회와 연계하여 ‘전환기 지방정부 갈등이슈와 해법 찾기’란 주제로 행사부 관계자, 충남도 갈등관리담당관, 보령시·서천군·청양군·부여군 관계자, 학계,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의 2007년도 제3차 워크숍이 최병학 박사(포럼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의 ‘지자체 갈등관리의 의미와 방향’이란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이선우 교수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써의 Policy Dialogue’, UNDP금강습지사업관리단 최진하 단장의 ‘갈등이슈 지역에서 지역공동체간의 입장 차이’란 주제발표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으로 ‘포럼’과 충남 권역별 갈등관리 정책포럼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 포럼 운영 방안, 갈등관리 기법 교육,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등 충남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 실무 워크숍 가져

- 지자체 연구원의 발전과 전략,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전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회장 김용웅, 現 충남발전연구원장)가 주최한 실무 워크숍이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안면도 오션 캐슬에서 행정자치부 안경원 사무관, 지자체 연구원 실무책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연구원의 발전전략”, 연구원 경쟁력 제고 및 합리적 평가 방안, “연구원 경영합리화와 복지 향상” 등의 주제로 1박 2일간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발전연구원 염도민 부원장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 및 주요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현재 전국 시·도에서 출연한 총 15개 지자체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연구원의 위상이 결정되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연구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조직 개편, 전문적 연구를 위한 인력 확보와 자원의 활용,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네트워킹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도 연구 분과와 경영 분과로 나눠 실무책임자간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는데, 일부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원이 열악한 근무 조건과 복지, 비합리적 조직 구성, 과도한 연구 과제 수행에 따른 양질의 연구가 힘들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원의 발전과 정보 공유를 위해 실무워크숍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연구원 신청사 상량식



지난 10월 12일 오후 4시, 공주시 금홍동 지방공무원교육원 내에 들어설 충남발전연구원 신축공사현장에서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발전 신청사 상량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수연수원 등 기관장 및 관계자도 참석하여 상량식을 축하

하며 신축공사 현장을 함께 둘러보았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독립 청사를 갖게 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2,710.76m²) 규모로 2008년 2월 준공과 함께 3월중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위해 지역역량 강화를

- 관 주도 탈피, 마을리더 육성 교육, 시민참여 활성화 시급 -



란 주제로 10월 5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방안”이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의 도시지역은 양적성장과 중앙정부 의존적 발전 과정에 익숙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관련전문가·대학·지방연구원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능동적·자발적 실천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남대학교 박재복 교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은 주민과 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은 만큼, 올바른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고유의 토착적 의제 발굴 ▲관 주도의 추진기구 운영 탈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공동학습을 통한 전략 공유 ▲지역 공동체의 복원 또는 창출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마을 리더 육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는 “우리나라 농촌은 정책의 취지를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할 뿐더러 기존 교육이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충남지역 농촌지역 주민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을 리더 육성 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농촌지역주민의 97.8%와 담당 공무원의 88.9%가 마을리더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교육방식에 대해 농촌지역주민은 ‘주입식, 일방적인 교육’이었다는 평가가 45.3%, 스스로 고민하고 발표할 수 있는 ‘토론식, 참여식 교육’이었다는 평가는 28.3%에 불과하여 기존 교육방식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마을리더 역량배양이란 대상지역의 주체들의 공동실천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능동적인 실천 학습을 통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협성대학교 이재준 교수는 시민참여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면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등 파트너십이 강조된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시민교육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경기도 도시대학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은 물론 정체성 고취와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